



8면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성명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음 2월 29일)

제37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27일 완주군 봉동읍에서 수소산업의 핵심인 초대형 압력용기를 생산하는 덕산에테르씨티가 신규공장을 준공했다. 사진은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의장, 위호선·이수훈 덕산에테르씨티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소금융그룹 비전 이어가겠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3연임’ 확정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3연임에 성공했다. 탁월한 성과와 리더십을 앞세워 작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의 임지를 다져온 김 회장은 주주들의 지지와 이사회와 이사회를 통해 3년 더 JB금융그룹을 이끌게 됐다.



확정했다. 김기홍 회장은 신규 핵심 사업으로 △국내외 핀테크·플랫폼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시도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공동 대출상품 출시 등 공생 방안 모색 △국내 거주 외국인 금융시장 선도 등 크게 3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이날 취임사를 통해 “JB금융이 작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이라는 비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면서 “지금까지 구축한 경쟁력 있는 수익 기반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신규 핵심사업의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 수소산업 핵심 거점 본격 가동

덕산에테르씨티,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새 보금자리 마련

국내 유일 ‘이음매 없는 압력용기’ 기술 보유… 연 400여 대 생산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성장의 중심이 될 덕산에테르씨티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도는 27일 완주군 봉동읍에서 수소산업의 핵심인 초대형 압력용기를 생산하는 덕산에테르씨티가 신규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덕산에테르씨티 위호선·이수훈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의장, 유

관업체 임직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덕산에테르씨티는 지난 2023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약 6,400평 규모의 부지에 신규공장을 건립해 이날 준공했다. 새롭게 준공된 완주 신공장은 초대형 압력용기를 연간 400여 대 생산 및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부산·부산 공장의 생산능력과 합산해 연간 약 6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덕산에테르씨티 완주공장은 KGS, DOT 등 글로벌 인증 획득으로 다국적 승인 용기의 법정 재검사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최고의 품질 보장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수소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내 최대의 수소 운송저장용 튜브트레이를 생산하는 덕산에테르씨티(주)가 완주군에 오게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완주군 대표 수소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시장까지 선점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덕산에테르씨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혁신의 선봉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기원한다”며, “수소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완주 수소특화단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완주공장 준공이 완주가 수소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완주=염재복 기자

무주 부남면서 산불 발생

도, 피해 현장 점검… 김 지사 “이재민 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김관영 도지사 무주군 부남면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도는 피해 주민 보호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기사·사진 3면>

이번 산불은 지난 26일 오후 9시 28분경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인근 주택에서 발생해 인근 산림으로 확산됐다. 산불은 현재까지 20ha에 이르는 면적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청과 소방당국의 협업으로 오전 10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70%에 이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 1동과 농막 1동이 불에 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일 총 221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이중 135명이 귀가조치 됐으며, 나머지 86명은 부남면 다목적광장과 대티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무주군은 즉각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재민 보호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1:1로 배치해 생필품 지급, 위생관리, 심리상담 등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지원이 이뤄지며, 맞춤형 복구 및 일상 회복 계획도 병행해 수립 중이다. 무주군은 화재 발생 당일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장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해 수습에 나섰다. 현재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비용을 산정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산림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피해 복구계획 수립과 병행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 및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재정지원과 주택 복구,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임야에 대해서도 복구 사업을 추진해 환경 피해 최소화해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15일~4월15일) 동안 예방·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무주 산불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시련이지만, 도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이재민들의 아픔을 하투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조정 지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공직자윤리위,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도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등 201명… 신고자 평균 재산액 7억9083만원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7일 전북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도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시군의회의 의원 196명 등 총 201명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 대상 제외)의 재산변동 내역이 포함됐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가 2024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된 재산 내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2024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연말까지의 변동 사항이 반영됐다.

2025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결과,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약 7억 9,0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9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원 미만 보유자가 77명

(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자가 61명(30.3%)으로 뒤를 이었다.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20명(10%)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감요인은 자산 상속, 채무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등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신고 내역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 신고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의 사제가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 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매일 캠페인